

2 종합

대학가 인권기구 위기, 공감의제 발굴로 극복해야

오승현 기자 dirk0212@khu.ac.kr

과거 총여학생회 폐지 후 생긴 학생·소수자위원회(학소위)는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대변한다. 하지만, 최근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학소위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 5월 존폐 논의에 휘둘린 것이 대표적 예다. 우리신문은 학소위가 처한 현실의 원인과 그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대학가 인권기구 존폐 위기
탈정치화 분위기가 한몫

최근 대학가의 인권 단체와 기구들이 입지가 예전 같지 않다. 지난 4월,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생활자치도서관의 특별자치기구 지위 재인증을 부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에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쓴 게 그 이유였다. 고려대 또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지난 5월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여학생위원회가 외부 활동에 치중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부여했다. 징계 결과 두 기구를 없애고 새 기구를 만드는 신설 합병을 결정했다. 우리학교 학소위 논란 또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 초청'에 대한 비판 대자보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경대 신하균(사회학 2023) 학생회장은 “학소위 활동에 인권은 없고 정치적 의사 표현만이 가득하다”며 “이런 활동은 지원 없이 동아리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양우혁(응용영어통번역

학 2021) 문과대 학생회장은 “학소위의 활동이 학내보단 외부 활동에 집중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결국 일부 학생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점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인권 단체 '다움'의 기진 운영위원은 “대학 사회 전반에서 페미니즘, 인권, 소수자 권리, 나아가 '학생의 권리' 자체를 이야기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학소위 등 인권 단체의 존재 이유를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소위를 향한 관심 고조
혐오·애정 동시에 증폭되는 모습

논란 이후, 학소위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관심은 커진 상태다. 학소위 하현희(국어국문학 2024) 부위원장은 “이전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만 학소위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면 논란 이후에는 에브리타임 중심으로 학소위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올라오고 학소위를 새로 알게된 학생들도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과 강하게 지지하는 세력 모두 강하게 의견을 표현했던 계기였다”며 “혐오와 애정 둘 다 많이 생긴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짚었다.

정치권과의 유대나 특정 집단만을 위한 활동 전개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하 부위원장은 “탄핵 시위를 예로 들자면 특정 정당의 행사가 아니라 범국민적 집회였다”며 “정치권과의 유대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실천이었다”고 말했다. 또 “학소위가 추구하



학소위 존폐 논의 이후 학내 구성원이 학소위의 역할에 의문을 품고 있다. (사진=하시연 기자)

는 것은 '평등'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가치”라며 “특정 정체성 중심이 아니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소수자의 존재를 언급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중앙대 인권 네트워크 운영진 김영서 씨는 “소수자 인권을 말하는 건 정치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정치와 분리하려고 할 때 오히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는 모순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연세대 박주현(사회학) 교수는 “학생 사회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권을 때로는 주체적으로 이용해 다양한 의제를 설정 및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탈정치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소수자를 억압하는 흐름과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냉소적인 시각 탈피 위해
인권 의제 폭넓게 다룰수도

전문가들은 학내 구성원의 냉소적인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학소위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 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의제에 집중한다면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매달 다른 시의적절한 이슈를 선정해 활동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인권 의제를 폭넓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화여대 학소위의 경우 '사이버불링' 피해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특정인에 국한되지 않은 인권 가이드라인 개정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외대 생활자치도서관 또한 작년 동대문구 전세 사기 논란 당시 피해자 단체와 연대해 소수자 범위를 넓혀갔다. 학소위 하 부위원장은 “존폐 논의를 겪은 후 학내 활

동을 넓히려려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교양으로 젠더와 페미니즘, 반성폭력 교육 등을 제정하는 등의 제안을 한 다거나 장애 의제 관련 핫라인 구축, 양심 생리대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목소리 과대 대표 가능성도
학소위 존재가치 여전히

일부 학생들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더 다양한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 교수는 “페미니즘 리부트와 백래시를 거치면서 젠더 문제에 대해 전 사회가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진 상황과도 비슷하다”며 “학소위같은 단체들이 '학생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진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이 본인의 더 심한 고통과 피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개개인의 '고통배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 위원은 “학소위가 다루는 인권 및 소수자의 문제는 대학 졸업 이후의 사회에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있다면, 그들을 대표할 자치 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다양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학소위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 안전대책 미흡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한 캠퍼스 내 제도가 부실하고 관리단속이 미흡해 학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버스가 진입하고 경사로가 많은 캠퍼스 특성상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현직(국제학 2020) 씨는 최근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고 씨는 “평소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와중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었다”며 “전동킥보드를 서너 대 줄지어 주차한 경우도 목격했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도로의 모퉁이, 버스 정류장 등에 주차가 불가하다. 하지만 고 씨의 사례처럼 캠퍼스 내의 보도와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현(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 2024) 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급정거하며 넘어지는 운전자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국제캠은 경사로가 많은 지형상 전동킥보드 사용 시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실제로 기자가 선승관에서 체육대학관으로 이어지는 경사로에서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결과 최고 속도



체육대학 앞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무더기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원희재 기자)

는 28km/h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항 중 PM의 최고속도 제한은 25km/h다. 교내 도로 속도제한인 20km/h 또한 상회한다.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조병휘(도로공학)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아 경사로에서의 속도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내 경사로 구조 자체가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령 경사로가 끝나는 지점 이후에는 직선거리가 이어져야 운전자는 속도 조절과 전방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데 체육대학관 옆 오르막길에서 선승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 해당 구역에 대해 조 교수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주의력 확보가 어려워 도로공학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학 차원의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이자 대림대 미

래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구시대적인 법적 제도의 한계를 메울 새로운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며 “대학 캠퍼스는 도로교통법 영향이 적어 캠퍼스 내 자체 규정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은 작년 7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으로 캠퍼스 내에도 적용된다. 대학은 이전에 책임지지 않았던 교통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PM 관련 안전 규정 및 시설물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제 총무관리처 총무팀은 “PM 불법 주정차 방지와 질서 있는 이용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몰리는 행사에서는 PM 수거 및 출입금지를 업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캠퍼스 지형 정보를 분석해 위험도 평가 체계를 구축해 위험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안전 평가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